

# IMF 체제극복과 통상

본회 민간전자 통상협력위는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이해증진 및 효과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간의 효율적 통상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통상전략 포럼을 “IMF체제 하의 통상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민간전자통상 협력위원회위원, 50대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포럼의 주요 주제 발표 내용을 수록하였다.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김 석 동

## 1. 최근의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98. 6. 13) 303

### 1) 최근 경제현황

최근 외환시장은 가용외환보유고가 5월말 현재 343.5억불로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안정추세를 되찾고 있으나, 환율은 5월들어 노사관계 불안정, 인니사태, 엔화약세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에서 등락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다.

• 직접금융조달실적(억원) :

대기업 (97.1~4) 108,318 → (98.1~4) 134,899

중소기업 (97. 1~4) 9,999 → (98. 1~4) 1,401

이에따라 실물경제도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위축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환율(당일평균, ₩/\$)	98. 3말	4말	5.15	5.25	5말	6.13
	1,387	1,335	1,435	1,384	1,410	1,400

	97.1/4	2/4	3/4	4/4	97연간	98.1/4
경제성장(%)	5.7	6.6	6.1	3.9	5.5	△3.8
민간소비	4.2	4.8	4.8	△1.0	3.1	△10.3
설비투자	△0.2	△1.8	△12.7	△28.2	△11.3	△40.7

금융시장의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가하락세와 금융기관의 여신기피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다.

- 회사채 수익률(%) : (97. 12월말) 29.0 → (98. 6. 13) 16.8
- 종합주가지수(p) : (97. 12월말) 390.3 →

98년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소비·투자 등 내수의 부진과 재고의 급격한 감소로 △3.8%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생산은 내수부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97연간	97.4/4	98.1	2	3	4
산업생산(%)	6.9	5.5	△10.8	△1.8	△10.1	△10.8
실업률(%)	2.6	2.6	4.5	5.9	6.5	6.7

고 있으며 실업률은 경기침체 및 기업도산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2)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IMF 자금지원 이후 외채만기 연장,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 등 외환확보 노력으로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어려움은 해소되었으나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경색과 이로인해 성장·산업생산 등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신용위험증대와 금융기관의 BIS비를 제고노력으로 기업대출이 축소되어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한 기업까지 고금리와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 기업화되는 추세이다.

국제투자가들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고 보고 본격적인 장기 투자에 나서지 않는 등 대외신인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경제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외환유동성의 확보를 통하여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
  - 가용외환보유고를 연말까지 410억불 이상 확보
  - 민간부문의 자체신용에 의한 외환확보 촉진
- ◆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환거래 관계법령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입의 촉진

## 2.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 1) 현재의 현황

긴급한 외자유동성 부족사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 가용외환보유고 : (97. 12. 18) 39.4억불 → (98. 5월말) 343.5억불
- 환율 : (97말) 1,695원 → (98. 6) 1,400원
- 총외채중 단기외채 비중 : (96말) 63.5% → (97말) 44.3% → (98. 4말) 27.0%
- 외국인직접투자(백만불) : (98. 1) 130 → (98. 4) 567

향후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불안감과 인도네시아 사태악화 가능성 등 대내외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2) 향후 추진계획

- 연말 가용외환보유고 목표 410억불을 조기에 달성
  -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흑자 확대와 IMF 자금지원계획에 따른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의 해외매각, 외국인투자유치 및 민간부문의 자체신용에 의한 외화의 최대한 확보에 주력한다.
-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조기 추진
  - 외국인주식 투자한도 폐지(5. 25) 및 단기금융상품 조기 개방(5. 15) 등 자본자유화를 조기에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종합지원이 가능한 [외국인투자 촉진] 제정 추진(6월 국회)한다.
  - 투자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KOTRA를 중심으로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하고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활성화,

보조금·직업훈련비 등 재정 지원 확대 등 선진국형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한다.

- 외국환관리법의 전면개편(6월 국회제출) : 사전규제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외거래활성화와 유사시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제정 추진한다.

### 3. 4대 부문의 구조 개혁 추진대책

#### 1) 금융구조 개혁

◆ 금융구조 개혁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현재와 같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맞물려 이어지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회복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restructuring)한다.

- 금융기관 본연의 자본중개기능을 회복(reengineering)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위험관리능력을 제고(empowerment)하며, 금융감독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 금융구조개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기업부실이 증가하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주주·채권자 등의 적정한 손실분담(loss-sharing)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재정에서 부담하되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향후 추진계획>>

■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의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절하고 '98. 9월까지 제1차 구조조정 완료한다.

#### ■ 은행의 구조조정

- 98. 6말 이전에 BIS비율 미달은행의 회생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실은행을 정리한다.
- 98. 7월 이후 금감위가 승인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 98. 9말 이전에 기타 BIS충족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후 정리 추진한다.

■ 증권·보험·투신·리스 등 제2금융권은 대주주 책임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영정상화 여부 판단을 위해 자산실사와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부실기관은 정리한다.

■ 부실금융기관의 재발방지 및 금융기관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조기 도입
-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
- 여신심사위원회의 기능활성화와 편중여신의 규제 등을 통한 신용위험관리 강화

## 2) 기업구조개혁

- ◆ 기업구조조정은 5대 개혁원칙을 바탕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 기업경영의 투명성,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판별하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 ◆ 이제 정부는 과거와 같은 기업활동에 대한 관여를 지양하고 구조조정 추진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한다.

### <<향후 추진계획>>

-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98. 4. 14)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98. 7월까지 은행별 자체 기업부실 평가의 판정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
- 98. 6월중 증권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기업보유부동산 매각 촉진
- 부실기업을 인수·정상화·매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순수 민간베이스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설립한다.
- M\$A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합병시 이익제출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하는 등 절차 간소화 (98 상반기중 상법개정 추진)
- 기업분할시에도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98년중 세법개정 추진)
- 지배대지주 등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누적투표제를 도입 (98상반기중 상법개정 추진)

-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
- 기업의 조직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98상반기중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 3)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동을 유도한다.
- ◆ 취업알선망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동이동의 원활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향후 추진계획>>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기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노동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종과 능력에 부응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공급자위주의 훈련체제에서 수요자위주의 훈련 체제로 전환한다.

## 4)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

- ◆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념에 충실한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 ◆ 재정과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성 확대와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향후 추진계획>>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예산운영방식을 성과관리방식(Budgeting for Results)으로 전환한다.
- 향후 5년간(98~2002)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복잡·다기화된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국가 종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98년중 국고업무 처리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되 향후 예산, 세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과 연계해간다.
-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한다.(2000년부터)

■ 稅制와 세정 개혁

- 복잡한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하고 투명성 제고에 주력한다.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고 과세의 실효성이 적은 세목을 폐지하는 등 세목수 축소(98년중 제도정비, 2000년부터 시행)
- 과표 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98년중)한다.
-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재검토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를 도입(99년)한다.

■ 공공부문 혁신

- 중앙정부의 기능분석을 통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확대해 나가고 98년 하반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을 연계 추진한다.
- 98년부터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 제도를 마련하고 99년부터는 사업적 성격이 강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98년 하반기중 552개에 이르는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4.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대응

1)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개혁의 추진

- ◆ 구조개혁 과정에서는 실업 등 고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 ◆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구조조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토록 하여 구조개혁 과정에 적극 동참을 유도한다.
- ◆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한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공동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업은 스스로 약속한 5대 개혁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조정은 근로자의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한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며, 노동계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성실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성 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노력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회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98. 6. 2 현재 7.9조원중 14,684억원을 배정·집행
- 생활안정 대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실직자 직업훈련 확대
- 공공 노사업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 98. 3. 30 ~ 6. 2 현재 1,414억원 판매 (목표액 1.6조원 대비 8.8%)

2) 금융경색완화

◆ 외환위기 발생이후 고금리, 신용위험증가, BIS 비율부담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위축되어 금융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동남아시아의 금융불안으로 금융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금융경색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될 때 해소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경색 완화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향후 추진계획》

■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물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리의 하향 안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인하하고,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Mutual Fund 도입, 기업공개와 상장분리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수출부문, 주택건설업계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

- 중소기업 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여력 확충과 BIS 비율부담완화, 차입기업의 신용보완을 지원해야 한다.

- 수출입 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외환보유고, 수출입은행 자체 조달 자금 등을 통해 약 50억불을 지원, 수출입 금융전담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미분양 주택의 누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3,000억원 지원(국민주택 기금),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위해 9,000억원 지원(주택은행) 등 자금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3) 구조조정 재원조달

◆ 기업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한다. (유상증자, 해외차입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조달)

◆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은 금융기관의 자체노력을 통해 최소화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자도입 및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축소하고, 주주·채권자 등의 적절한 손실분담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2) 한국경제의 전망

◆ 98년중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추진

◆ 99년부터는 [경제안정]을 회복

◆ 2000년부터는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재도약] 이룩

■ 99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입금융의 정상화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를 확대하고, 이와 아울러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경제구조의 확립과 대외신뢰도를 회복하여야 한다.

■ 99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내수회복과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 향후 2년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내실화되어 2000년부터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참고〉 KDI 중기경제전망 (98~2002)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경제성장(%)	5.5	△1.4	3.1	5.1	5.3	5.5
· 소비	3.5	△4.5	2.6	4.6	5.2	5.4
· 투자	△3.5	△34.2	13.0	10.9	9.9	8.6
· 총수출	23.6	22.9	6.3	5.6	4.7	5.2
· 총수입	3.8	△4.7	17.1	8.9	7.1	7.9
- 경상수지(억불)	△86	286	155	116	97	83
· 수출	1,386	1,478	1,579	1,689	1,789	1,912
(증가율, %)	(6.6)	(6.7)	(6.8)	(7.0)	(6.5)	(6.3)
· 수입	1,425	1,188	1,394	1,532	1,651	1,779
(증가율, %)	(△1.7)	(△16.6)	(17.3)	(10.0)	(7.8)	(7.8)
- 소비자물가(%)	4.5	8.7	4.5	4.3	3.4	3.2
- 실업률(%)	2.6	6.3	7.0	6.1	5.3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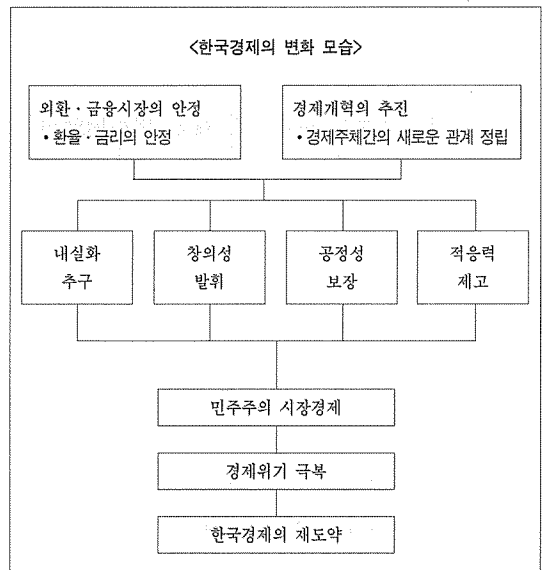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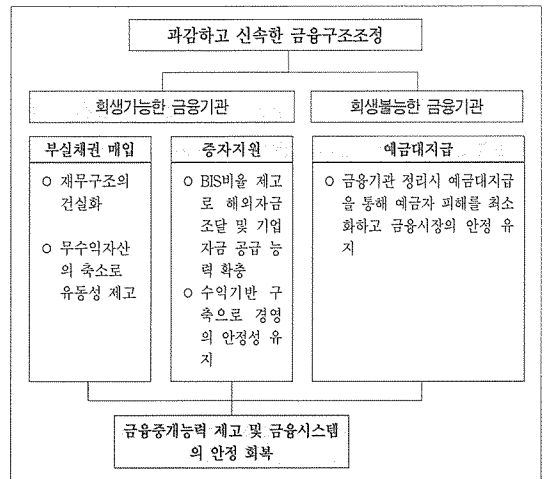
## 5. 한국경제의 비전

### 1) 경쟁력있는 한국경제의 건설

■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개방형 경제로 전환되어 세계 모든 나라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 모든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하여 국제 수준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

- 4대 부문 구조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에 맞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이



전환되어, 공공부문에 민간경영방식이 도입되어 수요자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의 중심축으로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되어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와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가져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